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1996. 12.

박 영 호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여

하

동북아에서는 신질서의 형성 움직임과 함께 각국간의 이해 관계에 따른 긴장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의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한반도 전략환경 속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반도 및 주변국의 안보정책과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냉전 이후 시기의 안보 개념은 국가 생존 뿐만 아니라, 군축과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는 군사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및 생태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대에는 일국의 안보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판단변수인 외부의 군사적 공격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요건과 그러한 위험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과 남북

한의 안보정책의 특징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한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처로 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군비관리와 군비축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전략적 선택의 차원에서 4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4자회담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점진적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소극적으로는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남한에의 사회주의체제 전파를 안보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점차 자국의 생존과 안보위협 억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북한은 4자회담의 형식이나 의제 등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담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국가전략은 전통적 우방국에 대한 “협력적 개입”(cooperative engagement) 전략과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자유시장·민주주의 “확대”(engagement) 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자국의 영향력 유지·확대와 기존의 안보 메카니즘의 보완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에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방법으로 「4자회담」을 한국과 공동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대북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4자회담이 유효성과 적실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질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로 인해 한반도 상황 전개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대국」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남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대동북아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의 국제적 보장자 역할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는 기존의 유대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반면, 한국과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대한반도 2분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관련국간 문제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건설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걸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방법면에서 4자회담보다는 자국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체는 남북한이 되어야 하고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의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 구도를 제시할 수 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는 남북한간의 상호 위협 인식을 불식시키고 쌍방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려는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에 맞추어 정전체제를 정상화하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복귀 및 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 남북간 기 합의사항의 이행, 북·미 제네바 합의의 실천을 통한 핵의혹 해소, 국제규범 및 법규의 준수 등 몇 가지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정전체제에 쉽게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 우회적 수단으로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질서의 정상화와 향후 새로운 질서창출과정에서의 국제적 규범 준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2단계로는 군사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긴장완화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힘의 바탕이 없는 평화상태 유지의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주국방력 확보가 요구되며, 동시에 북한의 느끼는 안보위협의 경감을 위하

여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체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에 상응하여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재래식 군비통제는 「힘의 균형」 하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에 대한 「힘과 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노력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협상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3단계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단계로 우리의 목표대로 「4자회담」의 논의가 진척될 경우, 남북한간 상호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틀내에서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틀로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공동 합의하거나, 미·일·중·러에 의한 보장장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범단계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남북간 평화공존기반을 바탕으로 평화통일협상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을 기반으로 한 군사통합방안의 협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은 우리의 국가목표인 통일의 달성 과정에 있어서 중간단계인 분단의 평화적 관리과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 자유시장경제의 발전, 해외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등 남한의 국가발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정적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안보정책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촉진을 위해 북한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을 갖도록 추구해야 하며, 둘째,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때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기본축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의 핵심적인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차원의 안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 하는 데는 우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자체의 수중에 있다는 점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4대 강국들간의 관계는 상호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다음의 5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남북간 군사적 대화채널의 구축이다. 이는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기간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태세의 체계화 측면 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채널로는 정전위의 정상화와 함께 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즉 4자회담의 틀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미 안보동맹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에 안정된 안보협력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까지 한·미 안보동맹은 앞으로도 한국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로 기능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미의 대북정책 조율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변화 및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질서 구축과정에서 양국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관계 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국은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과 주변국들의 보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단계적 통일구상, 남북한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 관계,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 북·미관계 개선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미국의 행정부, 의회, 연구기관 및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셋째로 한·일 안보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일 신안

보공동선언의 요체는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세력 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미국의 견제 속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는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진입해 있는 바, 이와 같은 한·일관계를 안보협력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조용하는 방식의 대북정책의 추진, 한·일 경제관계의 왜곡구조 개선, 한·일 과거사에 대한 냉철한 반성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측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정보 및 기술차원의 군사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적으로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동북아다자간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은 결국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적 안보협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안보동맹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이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로 자주적 안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안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가의 여부는 중국적으로는 스스로의 책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적 수단과 능력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당분간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전력의 확보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자주적 안보능력의 확보는 전력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총체적인 안보능력의 구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어느 강대국도 한국의 협력이 없이는 패권장악을 지향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때,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4. 정책적 함의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맥락에서 볼 때, 평화체제 구축은 비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간 신뢰조성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류·협력체제의 구축·확대와 같은 부차적인 목적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안보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차적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통일추진과정에서의 한국의 대북정책이 안보정책의 수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구조적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단계에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안보상황의 지속성과 변화를 균형있게 파악하여 안보정책을 발전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기존의 안보정책의 추진과 함께 다방면에 걸친 질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안보정책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해결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통일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II 장 주변 4국 및 남북한의 안보정책 평가	5
1. 주변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6
가. 미국	6
나. 일본	13
다. 중국	19
라. 러시아	23
2. 남북한의 안보정책	28
가. 남한	28
나. 북한	30
제 III 장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 입장	40
1. 남북한	40
가. 북한	40
나. 한국	45
2. 주변 4국	48
가. 미국	48
나. 일본	50
다. 중국	52
라. 러시아	53

제Ⅳ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	55
1. 제1단계: 정전체제의 정상화	56
2. 제2단계: 군사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긴장완화	58
3. 제3단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59
4. 제4단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범	61
제Ⅴ장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62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62
2. 정책대안	66
가. 남북간 군사적 대화채널의 구축	67
나. 한·미 안보동맹의 질적 발전: 새로운 제도적 관계의 구축	70
다. 한·일 안보협력의 기반구축	76
라.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준비	78
마. 자주적 안보능력의 확보	81
제Ⅵ장 결 론	84
참고문헌	87

제 I 장 서 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탈냉전의 질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질서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의 요체는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 위주의 안보개념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비군사적 차원의 문제들을 포괄하며, 그러한 개념 하에서 각 나라가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다.

미·러의 동반자관계 발전, 미·일의 신안보공동선언, 중·러의 관계개선,¹⁾ 미·일의 대북접근, 한·중 및 한·러관계의 발전, 역내 경제협력의 심화,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구성과 발전,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관심의 증대²⁾ 등은 탈냉전의 구도하에서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을 고무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정되고 평화로운 역내 질서의 구축을 위협하는 갈등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탈냉전의 추세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역할증대 움직임과

-
- 1) 1993년 11월 11일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는 1994년 9월 3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양국정상간에 상호핵무기겨냥 해제, 국경분쟁 해소 및 무역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에 조인하였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2) 다자안보협력체를 향한 움직임중 대표적인 것은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의 정부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미·일·중·러 및 한국 등 5개국의 학자와 정부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다.

양국간 군비경쟁,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과 일본간 釣魚島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갈등, 일·러간 북방도서를 둘러싼 갈등, 러시아의 정세불안, 대만문제, 무역분쟁 및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미·중간의 갈등, 무역 불균형 문제로 인한 미·일 갈등 등은 동북아 4강간 세력균형의 재편과정에서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정세변화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경제적 및 전략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냉전질서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일 삼각체제와 북·중·러 삼각체제간의 대립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역내 국가들간에 명백한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으나 신뢰구축조치, 군비통제정책, 다자간 안보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이 지역 군대의 성격이 기술적 측면에서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상군 위주의 전력구성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³⁾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전세계적 확산과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추세가 동북아에도 적용되고 있다. 각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의 정책은 상황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관계

3) 폴 브라켄, “미래의 동북아 안보협력: 기회와 문제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pp. 27~28.

라는 명분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실리추구에 따라 점차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안정적 요소와 함께 새로운 갈등이 현재화될 수 있는 불안정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강국들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특히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증대함에 따라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이 지역의 최대 당면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군사적 차원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 및 상호의존, 정치·외교적 관계 개선 등 비군사적에서 이들 국가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체제발전의 구조적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미접근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카드를 가지고 북·미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국과의 공식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새로운 협상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휴전선 일대에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공동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

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동북아지역 신질서 구축차원에서는 물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한반도 전략환경 속에서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과 남북한의 안보정책을 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관련국의 입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바람직한 단계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II장 주변 4국 및 남북한의 안보정책 평가

한 나라의 안보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부터 출발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즉 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 바탕을 둔 안보정책은 이념적 대립이 더 이상 국가관계를 지배하는 주요 변수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 이후 시대의 안보는 국가생존 뿐만 아니라 군축과 전반적인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는 군사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및 생태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를 이해할 때, 강화된 안보는 군축을 가져오는 조건을 창출하는 한편,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각 나라의 발전과정은 군사적 및 비군사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좀 더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국제체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보를 강화하며, 그에 따라서 군비통제와 군축을 촉진할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대에는 모든 국가의 안보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판단 변수인 적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의 위협성

1) Dietrich Fisher, *Nonmilitary Aspects of Security: A Systems Approach*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td., 1993), p. 9.

2) Ibid., pp. 9~10.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그러한 위협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 나라의 역사적 경험은 안보위협을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한 나라의 국제체제에서의 위상이 안보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및 상대적인 힘은 안보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제약, 압박 및 기회요인이 되는 것이다.³⁾

안보정책의 형성에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과 남북한의 안보정책을 평가해본다.

1. 주변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가. 미 국

(1) 신안보정책 구상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냉전체제의 종식, 미국방예산 감축의 요구 등 새로운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대아시아 안보정책을 검토하는 두 차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⁴⁾ 두 보고서에서는 미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4) 첫번째의 보고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C.:

국의 전진배치방위전략(forward based defense posture)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금세기말까지 이 지역주둔 미군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을 구상하였다.⁵⁾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속에서도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한다는 목표⁶⁾하에 1993년 10월 「밑으로 부터의 검토」(Bottom-Up Review)에 의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여 승리하는 Win-Win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제시하였다.⁷⁾ Win-Win 전략은 아직도 현실적 운용성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나,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동과 함께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어 미국은 94년 7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보

U.S. G.P.O., April 1990)이며, 두번째의 보고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이다.

5) 다만, 2차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1차보고서에서 제시된 3단계 주한미군 철군계획에서 제2단계 철군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 p. 13.

6) 이러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John Ikenberry, "The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May/June 1996) 참조; 아이켄베리의 주장의 핵심은 냉전 이후의 질서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연장으로서 미국은 이와 같이 서방질서로 통합된 세계질서 속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7) Les Aspin, *Report of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⁸⁾

동북아에 대한 국가전략은 안보상의 전통적 우방국가에 대한 “협력적 개입” (Cooperative Engagement) 전략과 중·러·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자유시장·민주주의의 “확대” (Enlargement) 전략의 구체화와 개입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신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⁹⁾ 특히 미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포괄적 개입전략’ (comprehensive engagement)의 틀 속에서 ‘예방적’ 차원의 중국 견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¹⁰⁾

8)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세계적인 개입을 유지하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선 강력한 안보의 증진을 위해서 냉전 이후의 안보상황을 참작하여 다양한 전략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모와 준비태세의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며, 해외주둔을 지속한다. 다음으로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지구환경 차원에서 건실한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외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요구하기 위한 활발하고 통합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보호, 공고화, 확대함으로써 안보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1994).

9)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 이후 외교정책에 관한 첫 주요 연설인 오스트레일리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96. 11. 20)에서 재확인되었다. *New York Times*, November 21, 1996.

10)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 「국가전략」, 제2권 2호 (1996

미국이 주도하는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의 핵심은 동북아로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중요시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확대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의 국가전략에 입각한 對동아시아 정책구상은 95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동아·태지역 안보전략」 보고서¹¹⁾로 재정리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동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현 수준의 미군(약 10만명)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국방예산의 삭감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군주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동맹관계가 대아시아 안보정책의 요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²⁾

년 가을·겨울), pp. 16~17.

11)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P.O., February 1995).

12) *Ibid.*, p. 10;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미국은 금년 4월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관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여전히 중요하며,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가 적절한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대체는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이후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한국과 강력한 방위동맹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¹³⁾

한편 미국은 북한을 이 지역의 불가측성과 잠재적 위협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대규모의 공세적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등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위협은 물론 아시아지역 질서 및 전세계적 차원의 비확산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잠재적 적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주둔국들과 방위비,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군의 주둔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확대전략을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북한과 경수로 2기 건설, 대체에너지 제공, 그리

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동 선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국의 역할을 분담할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1996년 12월 2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각료급 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97년 가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13) Ibid.

고 관계개선에 합의하고, 대북 쌀지원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것, 4자회담 및 제네바합의 이행과 북한 잠수함사건 해결을 분리하여 추진하려는 것 등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례이다. 이러한 대북접근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기존의 전력만으로는 운용하기 어려운 Win-Win 전략의 운용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한 접근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북한카드’를 확보하려는 맥락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북·중관계에 미국이 관여할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장래에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경우 북한이 전략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⁴⁾

결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한국과의 기존의 쌍무동맹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지역안보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접근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군사관계에도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3) 다자안보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아.태 다자안보구상의 대두 배경은 기존의 쌍무적 안보메카니즘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군비경쟁 등 지역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

14)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 p. 17.

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기존의 ARF(ASEAN Regional Forum)와 APEC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약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안보를 통한 “협력적 개입”으로 아·태 지역의 지도자 역할 및 정치·안보·경제적 주도권의 확보,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라는 대화, 협상, 군비통제의 예방 외교를 통해 분쟁의 방지와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¹⁵⁾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태 다자안보협력의 요소로는 협의를 통한 상호안정 증대, 핵확산 방지,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감축, 군사투자와 확산에 대한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들 수 있다.¹⁶⁾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모든 지역국가들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잠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견제하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군사적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쌍무적 관계 이외에도 다자간의 안보협약의 협력을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15) 「협력적 안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호주의 외무장관이었던 Gareth Evans, *Cooperation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London: Allen & Unwin, 1993)을, 그리고 미국측의 구체적인 구상에 관해서는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 Janne E. Nolan (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4) 참조.

16) 1994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Draft), 6 May 1994.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 7개국가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동북아 7국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⁷⁾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4자회담」을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일 본

북한과 미국간의 핵동결과 관계개선에 대비하여 온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유대로 인하여 한반도의 상황전개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금과 기술을 이용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여 왔다. 일본은 군사안보차원에서의 이해와 역할이 앞으로는 외교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경제대국인 일본은 군사대국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7) 「한겨레신문」, 1996. 11. 18.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피선된 후 “정치대국”으로 한반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1)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일본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참여하여 KEDO의 집행이사국이 되었다. 일본은 그동안 NPT 체제를 정치적·기술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적 노력을 수락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화학무기협정(CWC)에의 가입, 생물무기협정(BWC)의 강화 등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군비통제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화생무기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으로서 이들 무기를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군비통제회담에서 매우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무기의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이른바 범용기술(dual-use technology), 특히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서방국가들과 함께 강력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¹⁸⁾

18) 핵비확산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최근 입장은 「日朝國交正常化會談」 일본측 대표이면서 亞太協力 담당 全權大使인 엔도 테츠야(遠藤哲也)의 논문, Tetsuya Endo, “Counter-proliferation: What Should Be Done I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Fails?” (Symposium on Proliferation and East Asian Security, sponsored by Yomiuri Shimbun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Tokyo, October 26, 1994) 참조.

(2) 다자안보협력 적극 참여

일본은 94년 7월 방콕에서 거행된 제1회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상호신뢰구축장치(MRM, mutual reassurance measures)로서 지역국가들의 국가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방위백서의 발행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큰 차원의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자안보협력에 있어 미국이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일본은 재빨리 “미국중심의 다자안보협력”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일본의 단기적 이해는 북한 등 주변국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활발한 대화와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중·장기적 이해는 대화와 교류가 진전됨에 따라 역내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예를 들어 평화유지활동,²⁰⁾ 해상초계,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19) 94년 8월 12일 공개된 防衛問題懇談會의 報告書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형태: 21세기를 향한 전망」(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在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은 (1)능동적, 건설적인 안보정책, (2)다자안보협력, (3)미일안보협력의 기능 충실, (4)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방위력 유지 및 운용을 기본적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요약으로는 「朝日新聞」, 1994. 8. 12 참조.

20) 일본은 1992년 6월 국제평화협력법을 제정하여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후 일본은 자위대의 시설부대(약 1,200명), 정전감시요원(16명) 등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으며, 유엔의 모잠비크 활동과 르완다 난민구제 활동에도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방위백서」(1995. 6), pp. 156~159 참조.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중·일 3국간의 안정된 3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²¹⁾

일본은 또한 한국과도 군사교류 및 안보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94년 4월 한국의 국방장관이 최초로 일본을 방문하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연습함의 상호방문, 군용기 비행계획의 사전 상호통보, 해군함정의 상호방문을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가능성 증대와 전략적 가치의 상승, 그리고 대주변국 군사협력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의 안보상황과 관련한 의제들이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²²⁾ 다자안보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정부개발원조(ODA)와 배상문제

일본은 1994년에 다시 세계제일의 ODA 공여국이 되었다. 그중 상당부분이 아·태지역에 제공되고 있고, 1993년도에는 전체 쌍무

21) Sakutaro Tanino, "East Asian Security and the Role of Japan," (Symposium on Proliferation and East Asian Security, sponsored by Yomiuri Shimbun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Tokyo, October 26, 1994), p. 6.

22) 일본은 1995년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에서도 천명되었듯이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미·일 안보체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안보협의체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ODA 중 약 60%가 아시아지역에 제공되었다. 제공되는 ODA는 항만, 철도, 에너지, 통신, 도로 등 경제하부구조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몽고나 베트남의 경우처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면 ODA제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과거 일본이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경제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점과 북한의 경수로 지원시 재정적 지원을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배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반응을 보인 점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대북경제정책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콘소시엄의 설립과 운영에서 일본의 역할은 일본의 이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북한도 별도의 대일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줄타기가 예상된다.

(4)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일본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일본에 대한 지전략적인 중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중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크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대북 수교를 위해 바로 대사급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불합리

한 주장과 요구를 감내하였다.²³⁾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 못지 않게 일본은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한반도에 대한 입지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²⁴⁾

현재 일본은 북한체제가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일본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십만 이상의 북한주민이 밀려들어 올 가능성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일본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한반도의 혼란과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동적으로 감수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성장과 정치개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공존과 점진적인 통합은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한과 별도로 게임을 전개할 수 있고, 일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일본의 남북한 통일비용 지원폭도 대폭으로 절감할 수

23) Dae-Sook Suh, "North Korean Foreign Policy of the 1990s," in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pp. 672~673.

24) 장기적으로 일본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음 단계에 가서 양국이 아·태지역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과 지역안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aka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Foreign Affairs*, Vol. 65, No. 1 (Winter 1988/89), pp. 15~28.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일본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 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과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를 최우선의 국익으로 삼아 왔다.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²⁵⁾ 과거 동북아지역의 패권국가로서의 야심을 다시 한번 충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여러 차원에서 보이리라 전망할 수 있다.

(1) 전력 현대화를 통한 군사대국화 추진

중국은 94년도에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20.3%(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약8%)나 증액시켰다. 이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최고의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잘 알려진 바대

25) 중국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21세기 초에는 미국, 일본, EC와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Zbigniew Brzezinski, "America's New Geostrategy," *Foreign Affairs*, Vol. 66, No. 4 (Spring 1988), pp. 680~699; David Shambaugh,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pp. 86~106 참조; 또한 세계은행은 중국이 2020년에 이르면 세계 제1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로 중국의 국방비는 정부의 공식예산 이외에도 무기판매 및 군판 기업에서 획득한 예산의 수입과 기타 정부기관에 배분된 국방관련 예산 등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는 공식발표의 2~3배로 추정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에 발생하는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다.²⁶⁾

중국은 특히 일본의 군사강국화 움직임을 견제하려 하고 있으며, 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²⁷⁾

(2) 한반도 비핵화 지지

그 동안 중국은 핵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반대 내지 기권하였고, 대화를 통한 핵사찰문제의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저변에는 북한에 대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려는 것과 북한의 핵무장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정의 확산과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의

26) 김창수,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국방논집』, 제21호 (1993년 봄), p. 45.

27) 중국의 인민일보는 4월 23일자 사실을 통해 미·일이 안보체제를 강화하여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발상은 냉전시대의 낡은 방식이라고 비난하였다. 『중앙일보』, 1996. 4. 25; 중국의교부 심국방 대변인은 일본 NHK-TV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한 양국관계의 확장은 아·태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정동, “중·일 ‘덩치키우기’ 고래싸움,” 『NEW+』, 제32호 (1996. 5. 2).

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반사적으로 중국의 핵 무기현대화 및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견제가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의한 핵확산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서방국가들처럼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이로부터 발생될 일본의 군사증강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의 방치 책임이 중국에게도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과의 갈등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핵무장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개입

북한이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려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완전한 지지가 아닌 조건부 지지이다. 이미 중국정부는 전기침 외교부장의 공식견해를

28) 이러한 분석은 동북아의 기존 핵전력과 북한의 핵확산의 세계전략차원의 의미를 분석한 Gerald Segal, "What Can We Do About Nuclear Forces in Northeast Asi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 No. 2 (Winter 1994)에 잘 나타나 있다.

빌려서 “정전협정은 유효하며 준수되어야 한다”라든지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라든지 이 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정전위 중국측 대표의 소환과 그후 철수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철수 요구를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불쾌하게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중국도 한반도 평화 체제속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에서 기인한 것은 물론이다.

한국전쟁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참전했고,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이기도 한 중국이 자국의 이해가 배제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함께 한 사회주의 우방으로 김일성 사후 대북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4) 대한민국도 이분화 정책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시대의 종결 이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남게된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핵문제에서 시작된 북한과의 협상에서 관계개선으로의 방향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전략의 목표를 동아시아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을 접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특히 미·북관계의 진전방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서는 북한과는 기존의 안보유대를 유지·강화하는 반면에 한국과는 정경분리원칙하에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한반도 2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화되고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이 사라지기까지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라. 러시아

199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국제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²⁹⁾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간의 협상에서 국내정치의 불안과 경제 침체로 인하여 대국인 러시아가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고, 따라서 한·러 국교수립 이후 몇 년 동안 보였던 한국 편향의 정책으로 부터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9) A. Zhebin, "Russia and Korea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pp. 175~176.

(1)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 및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강화

러시아는 소련연방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국주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NATO와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PFP)를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및 유럽 주도의 세계질서 형성에 대한 참여는 러시아의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국가이익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³⁰⁾

93년 11월초 발표된 '신군사독트린'에서 러시아는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사회경제구성에 걸맞는 발전방식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고유한 국가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금년 6월 엘친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국제관계 체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지역적 수준에서 안전한 국제환경의 보장 및 지역적 협력메카니즘의 바탕위에서 러시아의 군사·정치·경제적 입장을 확보·강화하는 것을 대외정책 목표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다.³¹⁾ 한편, 러시아는 무기수출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기수출 판매전략을 재정비하고 국제무기전시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

동북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독

30) 김창진,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pp. 96~98.

31)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 김창진, 위의 글, p. 98 재인용.

점적 이익을 배제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견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토적 중심이 동북아 방향으로 다소 이동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는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동북아지역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미국을 위시한 일국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개에는 충분히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³²⁾

러시아의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미국과의 외교안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전반적 관계를 개선하며,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입하여 발언권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재인식하고 있다.

(2)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극동 국경지대에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³³⁾ 러시아는 북한의 핵동결을 위하여 미국과 거의 동

32)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 발레리 데니소프 아주국 부국장은 한 국내신문 기고를 통해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 일변도의 외교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에 반대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4. 11. 9.

33) Valerii I. Denisov,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 Unification," *Korean*

일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자의 북한내 유입을 통제하였으며, 유엔안보리와 IAEA이사회에서 북한에게 핵사찰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³⁴⁾

그러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것은 핵확산을 묵인한다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약화와 붕괴 가능성, 이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의 약화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핵안전문제를 다룬 국제회의를 소집하자는 러시아의 구상은 러시아 외교의 초점”이라는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다자안보협약에 대한 러시아의 오랜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⁵⁾

(3) 북한체제 안정화 지원과 대북한 외교적 재접근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를 안정화함으로써 완충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하여 초래되는 혼란과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yungnam University, Organized by Kyungnam University & The American University,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 May 22~23, 1996.

34)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92년 11월 옐친 대통령 방한시 밝혔고, 다시 94년 7월 방콕에서 거행된 ARF회의 참석시 확인한 내용이다.

35) 외무부 대변인인 모이세예프의 기자회견(94.9.28)을 모스크바 방송이 보도하였다. 「내외통신」, 제9156호, 1994. 9. 30.

한·미·일 3국의 영향권 확대가 러시아의 국익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선호하면서도 자국의 영향력 확보차원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과 주로 외교적·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재접근을 시도하여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할 것이다.³⁶⁾ 지난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의 개정 의사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⁷⁾ 요컨대 러시아는 남북한 공존을 이용하여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각각의 협상력 제고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36) 러시아와 북한은 1992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국방 대표단을 교환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94년 9월 엘친대통령이 파노프 외무차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양국관계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한 바 있으며 북한에 대해 군사장비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A. Torkunov, E. Ufimtsev, *Koreiskya problema: novy vsglyad*, Moscow, 1995, p. 181; Evgeniy Bajanov, "Russia and North Korea,"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북한 정책」, 제12회 아태평화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6), p. 75~76;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대북 경제적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95년에는 「입업협정」(2월) 및 「과학기술협력계획」(6월) 체결, 어업공동위원회 개최(12월) 등이 있었으며, 96년에는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서 조인(4월)과 「투자장려 및 상호보호협정」(11월)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11월) 체결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일보」, 1996. 12. 12.

37) 금년 4월 러시아 부총리 이그나텐코의 방북시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의 조약을 유지하면서 개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Evgeniy Bajanov, "Russia and North Korea,"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북한 정책」 (제12회 아태평화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6), p. 75.

2. 남북한의 안보정책

가. 남 한

남한의 안보정책은 체제의 유지·강화 및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억제를 핵심적인 목표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냉전구조의 틀 속에서 남한의 안보정책은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한다는 군사적 안보에 치중되어 왔으며,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반공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이 북한이라는 주적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지향성을 강하게 띠어 왔다.³⁸⁾ 또한 군사적 안보에의 치중으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안보공약을 확보하는 것이 안보정책의 주요과제였다.³⁹⁾

그러나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긴장완화, 국내 경제력의 증대 및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에 따른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남한의 안보정책에서도 점진적인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정책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총력안보론' 시각으로부터 탈피하여 시대적 변화와 정치주권확보, 경제번영, 자원확보 등 비군사적인 다양한 국가목표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총체적 안보'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안보

38) 민병천, 「한국안보론」 (서울: 대왕사, 1985), pp. 272, 392~398.

39) 한승주, "전환기 한국외교의 과제와 선택," 「사상」 (1992 여름호), p. 260.

정책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특히 냉전체제 종식 이후의 혁명적인 세계질서 재편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속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인 북한의 대남위협이 주·객관적인 상황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안보정책은 실제에 있어서 남한의 흡수를 통한 전한반도에서의 공산화완성에 있다기 보다는 자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방향으로 축소되고 있다.⁴¹⁾ 북한의 지도층은 당분간 안보환경의 변화요인들을 주시하면서 현 체제의 유지와 함께 대남무력통일전략을 최소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원만히 실천될 경우, 남북관계 역시 본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한의 대중·러수교에 이어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 및 수교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의 여건이 확보될 경우, 북한의 대남무력통일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한의 안보정책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기반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또한 적어도 당분간은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나, 점차적으로 북한과의 지속적

40) 백종천·이민룡, "남북합의와 총체적 안보론,"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1992 여름); 차영구, "21세기 한국의 평화와 안보,"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제3차 미래정책 공개토론회: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외교」(1992. 9. 23); 박영호, "통일과 안보간의 관계정립: 이론과 실제," 한국지역연구협의회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1993. 4. 11) 참조.

41) 최근 몇년 동안의 김일성 신년사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처하여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993년도 신년사에서는 전례없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열강의 협조 요구 및 4대군사노선을 통한 방위력 강화가 강조되었다.

인 군비경쟁보다는 한반도에서의 군비관리와 군비축소를 향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더욱이 남한의 안보정책은 통일정책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의 중요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을 포함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²⁾

남한은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대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침공을 하지 않는 한 무력에 의한 통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시의 군사력은 평화통일을 위한 비군사적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은 억제와 군비통제, 그리고 비군사적 교류증진 등이다.⁴³⁾

나. 북 한

북한의 안보정책도 일반적인 국가이익의 테두리 속에서 살필

42) 이미 한국은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의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안보협력체제 성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43) 유재갑, “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년 안보학술토론회 발표논문, 1993. 7. 7), p. 6.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국가이익은 대체적으로 ① 한반도의 통일, ②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의 보존, ③ 북한의 독립유지, ④ 경제발전 및 군사현대화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특히 일당지배 국가인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적인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다.⁴⁵⁾ 이에 따라 소극적으로는 북한지역내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완성을, 적극적으로는 남한지역으로의 사회주의체제 전파를 안보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무력행사의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의 안보정책은 군사정책과 동일시 되었으며, 전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는 군사정책을 일반적인 국내정책보다도 상위의 개념이 되게 하였다.⁴⁶⁾

지난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의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에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⁴⁷⁾고 결의하였으며 전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44) 노만 D. 레빈, “북한의 대외군사관계,” 이흥구·로버트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pp. 285~286.

45) 조선로동당 규약(1980. 10. 13 제6차 당대회 개정)은 당면목표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p. 543.

46) 백종천, “군사: 일관된 전력 우위 유지 정책,” 이상우 외,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330.

47) 「조선중앙년감」 (1963), pp. 157~163.

간부화, 전군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이 북한의 안보정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천노선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북한의 안보정책은 통일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사상적 차원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 혁명의 전략 기조인 3대 혁명역량과의 관련속에서 살필 수 있다. 3대혁명역량은 ①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 ②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그리고 ③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로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첫째,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지역에 혁명기지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으로, 정치적으로는 유일지배체제로, 경제적으로는 군수산업 우선주의로, 사회적으로는 인민을 당성·계급성·혁명성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4대 군사노선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증강이 시작되었으며, 북한의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서 “국방에서의 자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주권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으로서,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⁴⁸⁾이라는 군사자위정책으로 발전하였다.

48) 「김일성저작집」 28권, p. 534 및 32권, p. 513.

둘째,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는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내부에 북한체제를 지지·동조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지하당 공작, 통일전선형성 및 반혁명역량의 약화 등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결정적 시기조성'정책인 것이다. 군사적인 대안으로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 군비감축,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셋째,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와 혁명적 연계를 강화하고 제3세계 국가와의 친선,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중·소와의 군사동맹 강화와 대미평화협상 주장과 같은 군사외교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 및 남북한 관계의 변화 등 정책수행을 위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안보정책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남적화를 위한 군사우위의 정책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 증강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1987년부터 실시된 제3차 7개년 계획은 실패하였으며, 실제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부터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 이와 함께 대외무역의 격감, 대중국

49)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 -3.7%, 1991년 -5.1%, 1992년 -7.7%, 1993년 -4.2%, 1994년 -1.8%, 1995년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및 러시아교역 결제수단의 경화로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속은 군비증강을 위한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북한의 국방력이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⁵⁰⁾라고 말하여 북한의 과도한 군사화를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사회 내부의 불만을 축적시킴으로써 잠재적인 체제위기를 현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남한에서는 오랜 군사적 권위주의정권이 퇴각하고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북한이 기대하는 남한내부에서의 혁명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 남한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복지적 여건이 개선되면 될수록 북한의 안보정책은 남한사회의 공산화라는 적극적인 정책에서 북한내부에서의 사회체제지속이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기존 군사정책을 제약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1996. 6), p. 2 참조.

50)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256~258.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사회주의정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 등으로 표출된 신국제질서는 북한의 대외관계변화를 촉구하는 것 이외에도 체제의 붕괴와 정권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정권의 역량을 체제안보 내지는 정권안보에 집중시키도록 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북한을 지원하여 온 러시아와 중국이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이미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변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동맹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남한과의 수교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간섭 불가,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발표함으로써 남한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한 ‘조·중조약’의 군사동맹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있다.⁵¹⁾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중국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961년 이래 유지해온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을 변경시키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⁵²⁾ 북한

51) 「동아일보」, 1992. 8. 24.

52) 러시아는 엘친대통령의 한국방문시(1992. 11. 18~20) 북한과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군사자동개입조항)의 폐지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따라 쿠나제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여(1993. 1. 29~2. 1)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동 조항의 변경을 협의하였다.

과의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사실상 폐기시켰다. 결국 북한은 자국의 안보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군사동맹체제를 실질적으로 상실함으로써 군사력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북한이 사회주의정권 수립이래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이와 같이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정책은 남한의 흡수를 통한 전면적인 공산화의 완성이라는 명분 노선의 고수에 있다가 보다는 실제에 있어서 자국의 체제수호를 가장 중시하는⁵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⁵⁵⁾ 북한체제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성격의 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안보정책이 급격한 변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실질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당면목표는 가중되는 경제적 난관, 국제적 고립 등을 극복하여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⁵⁶⁾ 더욱이 북

53) 이성환,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1호 (1993년 봄·여름), p. 260.

54) 북한이 사회주의의 승리, 독립유지, 경제번영 및 통일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사회주의정권의 보호·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이익은 바로 정권안보에서 출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영태,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 pp. 5~11 참조.

55) 최근 몇년 동안의 김일성 신년사에서서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1993년도 신년사에서서는 전례없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조요구 및 4대 군사노선을 통한 방위력 강화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56)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카드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새로운 협상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노력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남쪽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⁵⁷⁾

결국 “(북한)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규정한 1992년 4월의 북한 개정헌법 제59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은 최근 공세적 입장에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안보정책노선이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면,⁵⁸⁾ 북한은 무력적화노선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체제의 한계상황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체제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하면서 점차로 남북공존의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남북대화의 활발한 전개 등 유연한 정책적 반응을 보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의 추진, 화생무기 공격능력 강화, 신형 장거리 유도무기 개발⁵⁹⁾ 등 공세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남한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고,⁶⁰⁾ 남

57) 이성한,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p. 262.

58) 북한 군사노선의 합리적 선택 대안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262~276 참조.

59) 북한은 SCUD 미사일을 개량한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 1호의 발사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아일보』, 1993. 6. 30), 금년 가을에도 실험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6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한의 군사적 질 및 전쟁수행능력이 개선되어 군사력에 있어서 남북한 균형 내지는 적어도 전쟁억제의 합리적 충분성이 확보되어 감에 따라⁶¹⁾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사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직결된다는 주변 강국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외국군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향후 남북한 전력수준의 완전한 균형확보나 남한 우위로의 발전 전망에 따라 북한이 기존의 군사적 모험노선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우선적인 정책대안은 기존의 정

61) 국제전략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의 군사력이 대등한 수준에도 달했으며 어느 일방도 외부의 상당한 지원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공격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1986*, p. 172; 이성환,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p. 264 주 56) 재인용; 한국의 국방부도 「국방백서」, 1990년판에서 남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추세와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군사력 균형론에 대한 최근의 국내연구로는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에 수록된 리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김재한, “국가안보와 군축의 딜레마”; 이장, “남북한 군축의 국내정치적 여건” 등을 참조.

책수행능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있으며, 대남적 화를 위한 군사전략의 수행은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⁶²⁾ 따라서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은 안보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소한 능력의 차원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방어적 억제전략개념을⁶³⁾ 거쳐 점차로 방어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2) 그러나 북한체제의 한계상황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지도부가 오판에 의하거나 또는 극한적인 상황의 돌파를 위해 전쟁을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63) 북한의 핵무기개발 추진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이 점차로 남한에게 유리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Ⅲ장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 입장

1. 남북한

가. 북 한

북한은 과도적인 정치상황의 지속, 외교적 고립,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등 삼중고에 따른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카드를 수단으로 이용한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전략¹⁾과 대남긴장관계 조성을 통한 체제안정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북한은 1993년 6월 미국과의 협상채널이 형성된 이후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요구한 이후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²⁾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왔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북·미간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북한

-
-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및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5~75 참조.
 - 2)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측 대표를 철수시킨 이후 북한은 군정위 중국측 대표를 철수('94.12.15)시키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마저 철수('95.2.28)시킴으로써 정전협정 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외교부 비망록('95.6.29) 등을 통해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은 94년 4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간 직접협상을 제의한 이래 자기식의 평화협정 체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死文化·無實化시키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94년 4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현 군사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미간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한은 같은 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측 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이어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94.5.24)하는 한편, 정전위 중국측 대표의 철수 실현(94.12.15),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와 유엔군측 군정위 및 중립국감독위원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95.5.3) 등을 통해 정전협정의 관리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금년 2월 22일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당장에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면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군사공동기구를 결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위한 북한측의 논리는 정전협정이 빈종이장이 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4월 4일 비무장지대(DMZ) 의무포기 선언을 한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병력 및 중화기 투입, 서해 5도에 대한 부분적인 항해방해, 군사분계선 훼손 및 DMZ 남측지

역에 대한 부분적 월경 등 의도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자행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논리와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행위를 분석하는 인식틀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국제조약의 성격을 갖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그러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牽強附會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년 이상의 남북대화와 협상의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무수히 보여 왔으며, 그러한 점에서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여온 “정상적인” 행태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체제유지전략을, 전술적 차원에서는 극한전술(brinkmanship)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왔던 핵 협상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4자회담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향후 북한측의 입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북한측 주장의 핵심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한이 최근 이러한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³⁾

첫째, 체제유지전략의 측면이다. 북한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외교적 어려움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민주평통 시사자료 14 (1996. 8), p. 7.

대내적으로 사상적 동요, 사회적 일탈 현상의 증대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북한 체제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위기를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유지 보장을 통해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대미평화협정 체결 공세는 바로 이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남한배제전략의 측면이다.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미국측의 제안으로 선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대북한정책에 있어서의 한·미간 갈등 관계를 조장하고 한반도문제 특히 안보문제 논의에서 한국측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대남전략의 측면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 통일에 대하여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대남전략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대미관계 차원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면서도 대남관계 차원에서는 기존의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

회 포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중적 전략수행의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해 그 동안 북한이 보여온 반응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4자회담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선은 한·미가 제안하고 있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가급적 사전에 추가적인 경제지원 등 실리적인 대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핵문제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단전술이나 살라미전술, 지연전술 등을 활용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한·미가 제안한 설명회에 참여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3자간 모임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4자회담에 쉽게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3자간의 설명회 자리에서도 북한은 미국측으로 부터의 체제보장에 대한 확약을 보다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식량지원과 같은 실리적인 요구 이외에도 김일성 사망시의 조문문제나 최근 구속된 대학생들의 석방문제와 같은 회담외의 사안을 거론함으로써 한국측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에도 동 회담을 한·미가 제의한 형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4자회담

의 형식, 의제 및 내용에 있어서 자기측의 주장을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질을 퇴색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회담 형식과 관련하여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중심이 되고 한국과 중국이 옵저버가 되도록 하는 협상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 미국과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고 남북간에는 「기본합의서」의 불가침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다루라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협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라도 주한미군 철수, 주한유엔군사령부 폐지, 한국의 군사력 강화 중지 등을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나. 한 국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지난해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개의 기본원칙으로 표명되었다. 3개의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하고, 둘째,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하며,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1996년 4월 16일 한·미정상

제주선언에서 재천명되었다. 즉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현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주도적 해결원칙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당연히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해결하여야 하며, 따라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당연히 남북한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논의·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인정하였듯이 현재의 남북한관계는 정전상태이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먼저 남북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이 해소되어 상호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이 유지·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남북한이 상호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협력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속에서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의 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야말로 실천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정부의 총리들이 체결하고 엄숙히 민족앞에 그 이행과 실천을 약속한 「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은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평화체제의 구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한이 상대방의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가 바로 안보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반세기 이상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만나기는 커녕 서로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하에서 남북한이 먼저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남북한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쌓는 것이 바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인 국력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과 체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회피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4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자회담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지역의 탈냉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4자회담 제의는 단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

협정체제 무력화와 대미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차원에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점진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전략적 구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2. 주변 4국

가. 미 국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국내정치적 동향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으나, 4만명 안팎의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새로운 전략적 구상에 따라 한·미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종래와 같은 힘의 투사를 견지하면서도 자국의 실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체제해체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고,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4자회담이 유효성과 적실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⁴⁾

이와 동시에 미국은 4자회담 제의가 한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정책협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⁵⁾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금년 9월 18일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초래된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1996년 11월 24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반영되었다.⁶⁾

또한 미국은 탈냉전의 동북아 질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간에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⁷⁾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정부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4) James T. Laney, U.S. Ambassador to Korea, "Washington and Seoul: An Alliance That Works," *The Washington Times*, November 3, 1996.

5) Scott Snyder,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Special Report*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6), p. 8.

6)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언론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잠수함 사건에 대한 수락할만한 조치(acceptable steps)를 취하도록 촉구하면서도 제네바합의 및 4자회담 추진의 원칙적 입장에 보다 강조되었다. 「중앙일보」, 1996. 11. 25.

7) 1996년 11월 20일 중국을 방문한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4자회담 추진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나. 일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의 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동북아환경의 변화와 자국의 경제능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미 및 미·일로 연계된 전략적 유대관계의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은 본질상 지원적이지 주도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며, 한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일본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대한반도 안보목표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에 관여할 수 밖에 없고, 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⁸⁾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일본은 한국과

8) 이즈미 하지메,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

미국의 4자회담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⁹⁾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의 틀이 형성될 경우, 국제적 보장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미국이 상당기간 동안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¹⁰⁾ 즉 일본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향후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도 통일 전망」(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통일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p. 80.

- 9) 하시모토 총리는 한·미가 4자회담을 제안한 96년 4월 16일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96년 9월 26일 유엔총회의 연설에서도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 10)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75.
- 11)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 110.

다. 중 국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여자로서 정전협정의 서명자이며, 러시아와는 달리 북한과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치·이념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일방, 북한과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변환경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90년대에 들어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주변국들과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대한반도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선택한 중국은 남북한 양국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 형성을 돕는 데 기여할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등 역외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관련국 쌍방간의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¹²⁾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도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12) 陳峰君·金景一, “韓半島統一形勢分析與中國政策思考,”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통일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pp. 42~45.

중국은 미국의 대북접근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4자회담에 대해서 관련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도 참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¹³⁾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동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지가 강화된 반면, 자국은 부차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고 인식하고¹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에 러시아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¹⁵⁾ 즉 러시아를 포함하여 한반도 주변 4국이 모두 한반도의 분단 및 분쟁의

13) 중국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해 왔는 바, 張廷延 주한 중국대사는 96. 11. 17 YTN과의 대담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입장을 언급하였다. 「조선일보」, 1996. 11. 18; 또한 96. 11. 20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 錢基琛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4자 평화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6. 11. 21.

14) 정은숙, “러시아의 對北 접근 동향 분석,” 「통일경제」, 제21호 (1996. 9), p. 84.

15) Evgeniy Bajanov, “Russia and North Korea,” p. 77.

당사자이며, 한반도 안정이 이들 국가의 안보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문제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폄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며,¹⁶⁾ 4자회담이 복잡한 한반도 문제를 푸는 틀로서는 실효성이 제약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러시아는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식, 특히 평화협정의 체결 주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의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는 4자회담 제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러시아, 일본, UN 등도 포함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Valerii I. Denisov,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 Unification," p. 10.

17) 주한 러시아대사관 일등서기관 Oleg Davidov와 필자의 면담(1996. 11. 20)

제Ⅳ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

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논의의 쟁점은 주로 당사자문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에 대한 대응방법, 평화체제 보장방법의 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추정) 등 이었다. 최근에는 평화체제 전환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이 평행선을 긋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방안도 실질적으로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동북아 질서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의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서는 정전체제 유지 → 불가침 부속합의서 실천 → 남북평화협정 체결의 3단계 방안,¹⁾ 정전체제 유지 및 군사적 안정성 확보 → 남북합의서에 근거한 평화체제 전환 → 평화체제 공고화의 3단계 정책 구도,²⁾ 기본입장 정립 →

1)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08~112.

2) 백종천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1995), pp. 14~22.

정전체제 정상화 및 위기관리체제 마련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안정성 확보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한반도 평화체제 출범의 5단계 방안³⁾ 등이 제시되었다. 안보적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전체제가 정상화되어야 하며, 둘째,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셋째, 남북간에 합의된 기본합의서의 틀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의 현실과 대남정책, 우리의 안보능력, 동북아질서의 변화, 통일정책과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 향후 독자적인 안보능력의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4단계의 평화체제 구축 및 정착 구도를 제시할 수 있다.

1. 제1단계: 정전체제의 정상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의 하나는 적대적 상대방과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호 침략(또는 침략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쌍방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사실상 무실화시키고 있으며, 정전협정이 일방의 도발에 대한 응징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보장의 장치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정전협정은 그 동안 남북한간의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pp. 36~45.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정전체제의 유용성 및 한계성에 대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광복 50주년 대통령경축사에서 남북당사자 해결, 관련국과의 협조를 통한 실효성 보장, 남북기본합의서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3대 실천원칙”을 제시하였다. 미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 정상은 금년 4월 16일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 “선 평화체제 기반조성, 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입장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는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복귀 및 정전협정의 성실한 준수, 남북간 기 합의사항의 이행, 북·미 제네바 합의의 실천을 통한 핵의혹 해소, 국제규범 및 법규의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조건 중에서도 정전체제의 정상화는 한반도의 위기관리체제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정전체제에 쉽게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 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써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게 자국의 정전위대표를 조속히 복귀토록 설득하며, 러시아에 대해서 선의의 중재 노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⁴⁾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민주평통 시사자료 14 (1996), p. 37.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입장은 기존 질서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나 향후 새로운 질서창출 과정에서도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제2단계: 군사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긴장완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힘에 바탕을 두지 않은 평화상태의 확보는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주국방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자주국방력 확보의 요체는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를 내실화하면서 우리의 중·장기 차원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정보능력과 통합전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관계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주한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느끼고 있는 안보위협의 경감을 위해서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체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안보관련 국제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을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로 합류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이 대미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미관계 진전과 연계한 한반도 긴장완화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남북대화 진전, 비

무장지대내에서의 긴장완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 북한의 테러행위 중지 등의 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경수로 지원과정을 남북한간 긴장완화조치의 시행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에 상응하여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식 군비통제는 안정된 「힘의 균형」하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힘과 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노력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진지한 군비통제협상에 임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군비통제의 추진방법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3단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우리의 목표대로 「4자회담」이 이루어져 논의가 진척될 경우,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상호신뢰가 어느 정도 조성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도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

「4자회담」의 틀내에서 남북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체제구축의 기본틀로 합의하고, 동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남북한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한반도 평화체제 공동합의서」(가칭)를 작성하거나 미·일·중·러에 의한 보장장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작전 통제권 환수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북한의 해체주장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해체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유엔사 해체는 한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동의가 결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기반이 가시적으로 조성된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제도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한·미군사관계의 조정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유엔사의 해체문제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나, 동북아지역 질서의 재편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진전과 함께 주한미군장래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동맹관계는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⁵⁾

5)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한국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여, 양국 중 어느 일방에 대해 태평양지역으로 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조약이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한·미 안보협력의 대상

4. 제4단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범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남북한간 기 합의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남북간 평화공존기반을 바탕으로 평화통일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을 기반으로 한 군사통합방안의 협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쌍무, 3각, 4각 외교관계의 발전을 기반으로 남북한과 역내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자안보체제내에서 남북한 군비통제와 군비감축을 역내 국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한반도 밖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윤덕민, “한국의 안보정책: 장기적 전략구상,” 『21세기 국가안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국가정보연수원 주최 국가정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2. 3), p. 160.

제 V 장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한국이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기본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여 전쟁의 재발을 예방하며, 안정된 평화상태를 기반으로 북한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이룩하고, 공존공영의 틀을 확보함으로써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평화체제의 구축은 바로 우리의 국가목표인 통일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중간단계인 분단의 평화적 관리과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역학관계는 압도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¹⁾ 그리고 북한은 7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사회적 이완현상의 확산증대, 탈북자의 증가 등 보여주는 것처럼 체제의 파국점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돌발적인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유동적인 북한정세하에서 여하히 남북긴장관계의 완화 및 핵동결 상태의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북한정권이 스스로 냉전

1)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5년 현재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서 남한의 국민총생산(GNP)이 4천5백17억달러인데 반해 북한은 2백23억달러로서 남한이 2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1996. 12. 2.

적인 사고를 버리고 개혁을 선택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결국 한국의 일차적인 정책목표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핵동결 유지를 통한 상황의 안정화이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내부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²⁾

또한 현 시대의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방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기체계와 전투력과 같은 직접적 수단 이외에도 지원능력, 안보의식 등 간접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비군사적 안보위협요소 또한 안보정책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즉 안보수준은 사회발전 정도와 직결되며 국력의 총체적 평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 자유시장경제의 발전, 해외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등 남한의 국가발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정적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또한 안보정책의 목표가 된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은 단순히 기존의 대북억제 중심의 안보개념으로 부터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고 민족적 발전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안보패러다임의 구상 차원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무력에 대한 억지능력을 구비하면서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하고 군사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안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군사문제를 비군사적으로 접근하여 안보·통일정책과 연계하며, 둘째, 대북 전쟁억지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긴장

2) 윤덕민, “한국의 안보정책: 장기적 전략구상,” p. 157.

완화와 평화정책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안보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을 갖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쌍방이 서로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어려우며,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의 공동안보인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위협당하지 않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힘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때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기본축의 하나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북억지라는 전통적인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기초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한·미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의 방위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책임진다는 자주적인 억지 및 방위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미협력이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지역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주변 국제환

경은 현실적으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에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남북한간의 이해관계의 합치로만 해결되기는 어렵다.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결국 동아시아의 지역적 균형을 조절하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의 각축을 한반도에 대한 안정과 평화에서 수렴시킬 수 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보정책은 냉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의 핵심적 과제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국가의 안정보장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의 핵심적인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력차원의 안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정책은 한반도 차원의 군사적 안정을 보다 확실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지역 차원의 세력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과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안보인식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안보의식의 형성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경제 및 기술교류이며 이 분야에서 공동이익의 영역을 확대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다.³⁾

3) 안병준, 「한·미·일·중 안보협력증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9), p. 11.

2. 정책대안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본전제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자체의 수중에 있다는 점이다. 지역 강대국들은 한반도 안보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을 창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한반도 안보의 실제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4대 강국들간의 관계는 상호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대 강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며 어떠한 새로운 분쟁이나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북한경제에 대해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경제가 개혁의 노력없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강대국 모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다면, 그것은 현 상태의 주기적인 와해나 분단의 지속이 가져오는 결과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들 4대 강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을 떠 맡지 않을 것이며, 분단해소는 남북한 양측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4) Ralph Cossa, “The Future Roles of the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Korea - U.S. Security Studies, Hyatt Arlington Key Bridge Hotel, Arlington, VA, October 26~27, 1995).

가. 남북간 군사적 대화채널의 구축

현재와 같은 남북한 대치 상황 아래서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主敵”으로 상정되고 있다.⁵⁾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 서로의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태세의 체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공세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내부적 모순에 의하여 폭발(implosion)할 경우, 의도적인 남침 이상으로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한 안보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군사적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현재 정전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군사정전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⁶⁾ 또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전략에 따라 북한이 정전체제에 쉽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북한은 그 동안 4자회담에

5)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 p. 18.

6) 예컨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회의가 개최(1996. 11. 14, 11. 19, 11. 26, 12. 3)되었으나, 북한은 이를 군사정전위의 정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군인과의 접촉을 통한 대미접근 및 협상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대해 명백한 태도의 표명을 유보해오고 있던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12월 2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4자회담에서 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형식의 회담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일면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원회는 불안정하게나마 지난 40여년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관리해온 국제적 성격의 기구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제5조)도 새로운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군 장성이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맡은 이래 군사정전위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이 미군과의 접촉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전위의 정상화를 위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군사정전위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정전위를 정상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승무원 유해의 송환문제를 정전위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⁷⁾ 이 문제는 4자회담의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나, 정전위가 남북간 적대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위기관리체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

7) 광대환 교수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제안하였다. 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7차 통일전략포럼(1996. 12. 12)에서의 토론에서 광 교수는 북한의 정전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해송환문제를 의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광 교수는 유해송환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추진하되, 다만 절차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의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에서 동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정전위를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을 관리하는 실질적 기구로써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전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북식량지원, 경제 협력 확대, 대북 국제차관 지원 등 비군사적 차원의 보상수단을 외교적 압력과 같은 강제적 수단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전위원회의 정상적인 가동과 함께 남북간에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합의되었으므로, 이 위원회의 가동을 추진하여 기존의 남북간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사공동위원회의 핵심적 기능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 원인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명백히 확인·이해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안보에 대한 공동이익을 조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적 변화, 즉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engagement policy)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공동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관리, ② 북한의 대남 도발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추진, ②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포기 유도, ③ 남북간 평화공존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지도부가 체제의 안정적 변화를 선택할 때, 북한도 체제생존의 차원에서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기반으로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의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을 배제하기 위해 흡수통일 반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북한 핵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의미와 성격변화에 대한 우리측의 구상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한반도의 군비통제 및 군축과 관련한 한국측 구상을 전달한다. 이러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은 4자회담의 틀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한·미 안보동맹의 질적 발전: 새로운 제도적 관계의 구축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으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북아에 협력적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된 안보협력 체제가 뿌리를 내리기 까지 한·미 안보동맹은 앞으로도 한국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군의 역할변경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차원의 양극 구조 해체,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이에 따른 남북한간 힘의 균형관계 변화,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정치 발전 및 상호의존 심화와 미국과 지역동맹국간의 관계 변화, 한국의 대중·러관계 정상화 및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의 경감 등에 따라 한·미 안보동맹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냉전구도에 안주하여 변화를 소극적 또는 피동적으로 수용하려 할 경우, 강건하고도 대등한 입장의 한·미 동맹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자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미의 대북정책에 관한 원만한 정책적 조율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다.

또한 아직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미국 조야에는 냉전 이후 미국이 냉전시대와 같은 수준의 군사적 투사력(*projection power*)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질적·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를 누리고 있으며, 북한의 전쟁수행능력도 더 이상 한국의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對韓안보 보장은 불필요하며, 대미의존은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정책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⁹⁾ 대부분의 일반 미국인들도

8) Jonathan D. Pollack and Young Koo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monica, CA: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RAND, 1995), pp. 1~4.

9) Doug Bandow,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보장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을 초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¹⁰⁾

한편, 외부국으로서 한반도에 미군을 장기주둔시키고 있는 미국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실패할 경우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¹¹⁾ 따라서 장기적인 동아시아전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질서 구축과정에서 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적합한 관계 설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양국의 사활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¹²⁾ 따라서 한국은 최소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다 내실화하도록 적극적인 대미 군사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미의 견고한 대북 억제력 유지가 북한측에 정확히 전달되고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 10)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관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Steven Kull, "Americans on Defense Spending: A Study of U.S. Public Attitudes,"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University of Maryland, December 19, 1995), p. 4.
- 11) Scott Snyder,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p. 15.
- 12) Jonathan D. Pollack and Young Koo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p. 15.

인식될 때, 북한지도부가 군사적 도발을 정책적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극단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건한 한·미 동맹관계는 북한이 군사적 수단의 비효용성을 인식하여 남북관계에서 비군사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반적 발전방향에 대한 한국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한국이 원하는 관계 발전단계를 미국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단계적 통일구상,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과 주변국들의 보장, 남북한 통일 이후의 한·미동맹 관계,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 북·미관계 개선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미국의 행정부, 의회, 연구기관 및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가 보다 부각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4자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역할변경문제를 핵심의제로 삼을 것을 주장할 것이다.¹³⁾ 물론 이러한 문제가 4자회담의 의제로서 포함될 경우, 주한유엔 군사령부의 해체를 의도하는 북한의 전술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자회담의 근본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13) Selig S. Harris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our-Party Peace Talks," 「4자 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p. 10.

따라서 한·미 양국은 평화체제의 전환과정에서 ① 한국을 배제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반대 원칙 견지, ② 정전체제 무력화를 의도하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강력 대응, ③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 유지 ④ 예방적 차원의 대북 외교적 설득 및 압력 행사 등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¹⁴⁾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한유엔사의 처리문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한·미의 적절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을 남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및 감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즉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평가 후 주한미군의 규모 재조정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②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통한 장기주둔의 가능성은 높고, ③ 미국은 전시에 한국군에 대해 해군 및 공군력 중심의 병력증원으로 지원하고 한국군은 지상군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④ 한국군은 전투 및 지원 구조, 즉 전쟁 지속력과 군수하위구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입장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14) 김창수,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한·미 안보협력 조정방향,” 『통일연구논총』, 제4권 1호 (1995), pp. 71~72.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미래의 한·미 안보 협력방향에 관한 연구,¹⁵⁾ 특히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필요할 경우 그 근거를 개발하여야 한다.¹⁶⁾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 원하는 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주한미군은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위협 감소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이지만, 완전한 철수는 상당한 기간동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이곳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와 주둔으로 인한 이점이 한국민은 물론이고 미국민에게도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진척될 경우,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의 장래, 유엔사 해체 등의 문제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군비통제에 대비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국이 군비통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에 의한

15) 한·미 안보협력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국신, 「한·미 안보협력 증진 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을 참조.

16) 한·미 국방당국은 1992년 10월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안보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Jonathan D. Pollack and Young Koo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1995), 참조.

위협의 감소 또는 소멸에 대한 평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 등에 바탕을 둔 미래의 한·미 안보협력의 청사진이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 주변국가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 한·일 안보협력의 기반구축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요체는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지원 받아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미국의 견제 속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잠재적 군사강국으로 동북아에서 정치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좋은 안보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통일한국의 가상적국이 되리라는 견해가 한국사회에 있으며 일본의 패권국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사실 한·일관계는 이러한 우려를 상쇄할만큼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진입해 있다. 양국간의 경제 및 인적 교류는 일본에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번영에도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 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안보협력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해 동북아지역 질서구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긍정적인

17) 윤덕민, “한국의 안보정책: 장기적 전략구상,” p. 150.

역할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일본의 대북정책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균형을 이루어 추진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역할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정하되,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일본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과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역할확대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안보동맹관계 및 미·일 안보동맹관계를 한·미·일 3자간의 안보협력이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본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군사적 움직임은 자제함으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일본경제론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본의 역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적, 정치적 역할과 군사적 역할을 무조건 동일시 하지 않는 융통성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마찰로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경색시키고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⁸⁾

한편,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

18) 김창수,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국방논집』 제21호 (1993), p. 52.

의 대북정책에 조응하는 방식의 대북정책의 추진, 한·일 경제관계의 왜곡구조 개선, 한·일 과거사에 대한 냉철한 반성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측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정보 및 기술차원의 군사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라.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준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적으로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동북아다자간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서독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대서양협력위원회(NACC) 등 다자안보협력기구를 활용하여 영국, 프랑스 등 우방의 서독의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동독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 및 소련에 대하여 광범위한 협력적 안보틀을 구축한 경험¹⁹⁾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은 결국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억제해야

19) John S. Duffield, "German Security Policy after Unification: Sources of Continuity and Restraint,"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5, No. 3 (December 1994), pp. 173~174.

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적 안보협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안보동맹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이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복귀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태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보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정전위대표를 조속히 복귀시키도록 설득하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러시아가 선의의 중재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의 장기적인 안보전략 구상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차원의 접근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심화되고 있는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동인식을 발전시키고, 점차로 군사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틀속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과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 및 평화보장의 실질적 방안장구를 위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은 중국의 국익과 상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자간 협의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 따라 한·러간의 군사협력강화를 통해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관계 개선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의미보다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이 확보됨으로써 결국 러시아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설득한다.

한편, UN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계가 있다. UN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로서 UN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동 사안에 대한 최소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와의 관계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²⁰⁾을 전달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며,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구축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한다.

20) 이들 간의 관계를 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S/1588)에 의해 유엔통합군사령관의 임명을 미국에 권고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의 집행기관으로서 유엔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상호합의에 의해 미 육·해·공군을 한국영토내와 주변에 배치)에 근거하며, 한·미연합사는 1977년 7월 26일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연합사 창설에 대한 권한위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과 1978년 군사위원회에서 하달한 「작전지시 1호」에 근거하여 동년 11월에 창설되었다. 즉 유엔사와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짐으로써 유엔사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의해 해체될 수 있는 반면,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마. 자주적 안보능력의 확보

한 나라의 안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가의 여부는 종국적으로는 스스로의 책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목표와 그 하위목표로서의 안보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제반 정책적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적 수단과 능력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말 현재 한국의 대북한 전력지수는 약 73%로서 한국군의 현전력은 총체적인 수량면에서 여전히 북한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그리고 누적 군사비에 있어서도 1992년말 현재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약 8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이에 더하여 북한은 독자적인 핵무기개발능력을 구축하는 한편, 사정거리 500km에 이르는 스커드 C형 미사일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비무장지대 북방 50km에 전진배치함으로써 남한의 절반 이상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사정거리 1000km에 이르는 노동1호 및 그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대포동 1·2호 등 전략무기를 개발해 왔다.²³⁾ 또한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생산·확보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1) 차진섭, “한국군의 장기적 전력 발전 방향,” 「국방경영정책연구」, 제1호 (1995), p. 66.

22)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 p. 207 도표 참조.

23) *Janes Intelligence Review* (1996. 12); 「경향신문」, 1996. 12. 2.

이러한 무기체계와 함께 북한군의 휴전선 일대 전진배치 등 공세적 전략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의 격차가 반드시 일방적인 열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한국군의 잠재적인 전쟁수행능력과 군사력의 적절한 운용이 뒷받침될 경우, 소극적 방어차원에서는 충분성이 있는 전력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⁴⁾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전력의 확보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판단된다.²⁵⁾ 한국이 총체적 국력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카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의 대북협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경험은 이러한 필요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또한 80년대 미·소관계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지 않은 평화체제 구축 추진은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재래식 전력의 증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자주적인 안보능력의 확보는 전력차원에서의 남북

24) 차진섭, “한국군의 장기적 전력발전 방향,” p. 66.

25) 이와 관련, 한국의 국방부는 1996년 12월 10일 독자적 대북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1998~2002)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공중조기경보기(AWACS) 2대, 한국형 구축함(KDX) 2척, 지대지미사일(ATACMS) 및 다연장로켓(MLRS) 등을 확보함으로써 조기경보 및 정보수집전력의 자주화와 대북 전쟁억지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6. 12. 11.

한간 대등한 수준의 확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 속에서 정치·경제적 차원의 국가발전 도모에 있다고 할 때,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 경제적 실리확보 경쟁 등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총체적 차원의 안보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국내적 차원의 정치·경제·사회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자심감있게 대처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어느 강대국도 한국의 협력없이 패권 장악을 지향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출 때,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²⁶⁾ 특히 21세기에 통일국가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적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체제, 아·태경제협력체(APEC), 동북아 경제협력 등 경제적 상호의존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화를 안보적 차원에서 강화·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²⁷⁾

26) 윤덕민, “한국의 안보정책: 장기적 전략구상,” p. 164.

27) 백진현, “세계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서울: 나남출판, 1995), pp. 464~465.

제VI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을 살펴 보았다. 평화체제 구축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조성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류 및 협력체제의 구축 및 확대와 같은 부차적인 목적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안보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차적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정책은 적어도 통일국가가 성립되는 시점까지는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통일추진과정에서의 한국의 대북정책이 안보정책의 수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일지배 독재체제인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북한정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김정일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더라도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고수라는 체제존립의 근거 논리는 북한지도부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김일성 시대의 정책을 답습하는 “遺訓統治”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체제보장을 확보·유지하려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는 일방,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회피하는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의도적으로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발전의 구조적 한계때문에 불가피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¹⁾ 만약에 북한지도부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장기적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체제붕괴(system breakdown)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 4국의 북한체제 안정화정책은 자국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생존정책과 이해관계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변화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이 전혀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안보상황의 지속성과 변화를 균형있게 파악하여 안보정책을 발전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정변수로 상정하는 안보정책의 추진과 함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1) 사회주의체제 발전의 구조적 제약요건과 변화촉진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통상, 군사협력관계의 구축 등 다양한 변수를 상정하여 보다 세련되고 원숙한 안보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국의 자주국방정책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에 대비한 국방정책의 수립, 새로운 한·미동맹관계의 정립, 그리고 대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정책의 수립 등 다방면에 걸친 질적인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안보정책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는 분단 반세기 이상의 기간동안 우리 민족의 발전에 중요한 축쇄로 작용해 온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의 해결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통일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국신.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서울: 국방부, 1995.
- 민병천. 「한국안보론」. 서울: 대왕사, 1985.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_____.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민주평통 시사자료 14, 1996.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6.
- 防衛問題懇談會의 報告書.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형태: 21세기를 향한 전망」.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在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 1994.8.12.
- 백종천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1995.

안병준. 「한·미·일·중 안보협력증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9.

정영태.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Aspin, Les. *Report of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6.

Carter, Ashton B.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P.O., February 1995.

Evans, Gareth. *Cooperation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London: Allen & Unwin, 1993.

Fisher, Dietrich. *Nonmilitary Aspects of Security: A Systems Approach*.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td., 1993.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Jonathan, Pollack D and Cha, Young Koo.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Report prepared for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RAND (1995).
- Pollack, Jonathan D and Young Koo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1995).
- Janne E, Nolan(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4.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1994.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2. 논 문

- 김재한. “국가안보와 군축의 딜레마”.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김창수. “미·북 관계개선에 따른 한·미 안보협력 조정방향.” 「통일연구논총」, 제4권 1호 (1995).
- _____. “동북아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국방논집」, 제21호 (1993년 봄).
- 김창진.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11.29.
- 리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 「국가전략」, 제2권 2호 (1996년 가을·겨울).
- 박영호. “통일과 안보간의 관계정립: 이론과 실제.” 한국지역연구협의회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 4. 11.
- 박정동. “중·일 ‘덩치키우기’ 고래싸움.” 「NEW+」, 제32호 (1996.5.2).
- 백종천. “군사: 일관된 전력 우위 유지 정책.” 이상우 외 공저. 「북한 4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백종천·이민룡. “남북합의와 총체적 안보론.”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1992 여름).

- 유재갑. “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3년 안보학술토론회 발표논문. 1993. 7. 7.
- 윤덕민. “한국의 안보정책: 장기적 전략구상.” 「21세기 국가안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국가정보연수원 주최 국가정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2. 3).
- 이성한.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1호, 1993년 봄·여름.
- 이 장. “남북한 군축의 국내정치적 여건.”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정은숙. “러시아의 對北 접근 동향 분석.” 「통일경제」, 제21호 (1996. 9).
- 陳峰君·金景一. “韓半島統一形勢分析與中國政策思考.”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통일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 차영구. “21세기 한국의 평화와 안보.”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제3차 미래정책 공개토론회: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92. 9. 23).
- 차진섭. “한국군의 장기적 전력 발전 방향.” 「국방경영정책연구」, 제1호 (1995).
-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1996.6.
- 한승주. “전환기 한국의외교의 과제와 선택.” 「사상」, 1992 여름호.

이즈미 하지메.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통일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레빈, 노만 D. “북한의 대외군사관계.” 이홍구·로버트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폴, 브라켄. “미래의 동북아 안보협력: 기회와 문제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Bajanov, Evgeniy. “Russia and North Korea.”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북한 정책』, 제12회 아태평화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6).

Brzezinski, Zbigniew. “America’s New Geostrategy.” *Foreign Affairs*, vol. 66, no. 4 (Spring 1988).

Cossa, Ralph. “The Future Roles of the Major Powers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Korea - U.S. Security Studies, Hyatt Arlington Key Bridge Hotel, Arlington, VA, October 26~27, 1995.

Denisov, V. I.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Kyungnam University, Organized by

- Kyungnam University & The American University,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 May 22~23, 1996.
- Duffield, John S. "German Security Policy after Unification: Sources of Continuity and Restraint."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15, no. 3 (December 1994).
- Ikenberry, John. "The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May/June 1996.
- Inoguchi, Takas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Foreign Affairs*, vol. 65, no. 1 (Winter 1988/89).
- Kull, Steven. "Americans on Defense Spending: A Study of U.S. Public Attitudes."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University of Maryland, December 19, 1995, p. 4.
- Laney, James T. U.S. Ambassador to Korea, "Washington and Seoul: An Alliance That Works." *The Washington Times*, November 3, 1996.
- Satoh, Yukio.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 Segal, Gerald. "What Can We Do About Nuclear Forces in Northeast Asi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KIDA, Seoul, vol. VI, no. 2 (Winter 1994).
- Selig S. Harris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Four-Party Peace Talks." 「4자 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11. 29).

Shambaugh, David.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Snyder, Scott.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Special Report,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6.

Suh, Dae-Sook. "North Korean Foreign Policy of the 1990s." in Sung Chul Yang ed., *Democracy and Communism: Theory, Reality and the Futur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Zhebin, A. "Russia and Korea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 19, no. 2 (Fall-Winter 1995).

3. 기 타

「김일성저작집」

「내외통신」.

「동아일보」.

「방위백서」.

「세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년감」.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1994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Draft), 6 May 1994.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1986*.

New York Times.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96-1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